

3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임신 중에 먹으면 안되는 약' 사전 자동점검시스템 가동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지난 '08.12.1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부금지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임부(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의료기관과 약국마다 가동된다.
-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를 돕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6%, 전체 약국의 98%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08.4월부터는 병용금지(함께 처방·조제되면 안되는 약), 연령금지의약품(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용이 금지된 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 2,200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새 희망과 새 빛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실명예방재단(회장 신경환)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시력 상실이 우려되는 안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 2,200만

(眼)을 대상으로 개안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무의촌과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개 지역 노인 12,000명에게 무료로 안 검진을 실시한다.

□ 올해 실시되는 무료 안 검진 사업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노인분들은 검사 대상지역 거주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 02-718-1102)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02-2023-8532)에 문의해 내용과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 최근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투자허용범위를 ±5%에서 ±7% 확대 -

□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水) 200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개최하여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에 변경된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 기존의 자산군별 투자 목표비중은 유지하되(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3.6%, 국내채권 69.3%, 해외채권 4.1%, 대체투자 6.0%),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국내주식, 해외주식 및 국내채권의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¹⁾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UN PRI²⁾(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었다.

○ 국민연금은 UN PR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투자 이슈를 파악하고 선진국의 선도적인 책임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국민연금은 가입기관 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책임투자 관련 이슈 및 벤치마크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의 발전, 연금의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정책 및 집행과정에서의 반영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 책임투자(RI / Responsible Investment) 또는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 RI): 투자이사 결정시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재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요소(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방법

2) UN PRI: '06.4월 UN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책임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한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규범으로 가입기관은 499개('09.2월에 이룸(특히, 전 세계 상위 20위 공적연금 중 9개가 PRI에 가입))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4.7% 인상된다.

* 노령연금 1,967천명, 장애연금 66천명, 유족연금 346천명 ('09.2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甲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3,500원(4.7%) 인상된 523,5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 배우자: 연 205,220원 → 214,860원 (9,640원 ↑), 수급대상자 1,305천명

* 자녀·부모: 연 136,800원 → 143,220원 (6,420원 ↑), 수급대상자 227천명('09.2월 기준)

□ 또한, 2009년도 적용 A값*(1,750,959원, 전년대비 4.4% 증가)이 산정됨에 따라 신규 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 반영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4월부터 적용된다.

국가건강검진 지정제 도입

- 3.22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

□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먼저,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설치·운영한다.

○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검진 권고안 제정

□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 공단은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 2008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 5천명이 배출되었으며, 제도시행 이후부터 '08.12.31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천 4백개소가 신설되었다.
 -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7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4천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천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천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천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천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09년도 약 9천명, '10년도 2만 5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시행
- 거짓이나 부정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로, 보험재정 안정과 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근절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2009. 4.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 (<http://www.longte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질 높인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암환자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 완화의료(palliative care)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권장)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 지원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08.9.11)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기관 34개소를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암환자완화의료 지정기관

지역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형태	완화의료 병상수
서울	전진상의원	의원	1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종합병원	13
	서울대학교병원	종합병원	27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병원	29
	성바오로병원	종합병원	15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종합병원	16
부산	부산성모병원	종합병원	9
대구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14
	파티마병원	종합병원	14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종합병원	16
	대구보훈병원	종합병원	16
	영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1

〈표 계속〉

지역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형태	완화의료 병상수
강원	갈바리의원	의원	16
전남	목포중앙병원	종합병원	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2
	순천성기롤로병원	종합병원	10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병원	14
	전북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0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11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의원	28
경기	모현센터의원	의원	1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종합병원	12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종합병원	12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합병원	12
	샘물 호스피스병원	병원	30
	샘안양병원	종합병원	16
	수원기독의원	의원	16
광주	광주기독병원	종합병원	23
	천주의성요한의의원	의원	26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종합병원	22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종합병원	12
	경상대병원	종합병원	11
경북	선린병원	종합병원	13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도 체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 3일 ‘문화예술강사 발대식’ 행사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우선적으로 '09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까지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이번에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복지시설 생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 둘째, 지역의 문화 및 복지기반 시설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일반아동·청소년에게는 실비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 셋째, 학기 중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나홀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캠프”를 운영한다.
-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명예교사(예술계 유명인사)가 주관하는 콘서트 등 프로그램에 소외 아동·청소년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강연이나 공연을 할 계획이다.

■ ■ ■ **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 4월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르신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당부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
 -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 **“진료비확인민원, 민원신청인에게 89억 8,000만원 환급 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21,830천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89,155천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하였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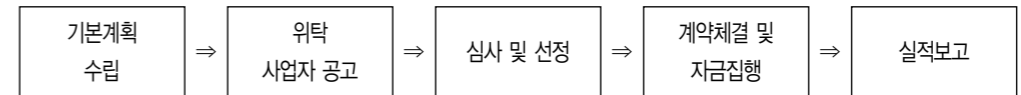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시
-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지원예정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3월중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자활공동체로 한정되어 개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지방이 소외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 이에, 복지부는 올해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을 130억으로 증액하고('08년 20억→'09년 130억), 지원대상을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발하여 저소득층 및 지방에 대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 및 신용제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던 이들에게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마이크로크레딧이란?

□ 마이크로크레딧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회 서비스 사업
- 우리부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20억원으로 총 170여개 자활공동체 지원 중
- 지원절차
 - ① (자금배정) 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② (자금집행)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개인)

